

“대통령·정치권 ‘교과서 국정화’ 손때고 백지상태서 논의하자”

문재인 사회적 논의 기구 제안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9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관련,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발행체제의 개선방안을 백지에서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저와 우리 당은 확정고시 전에 대통령에게 마지막 민생해결과 국민통합 차원에서 역사교과서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을 드린다”며 “역사학과 교육계 등 전문가들과 교육주체들이 두루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 발행체제 전반을 검토하고 논의해 보자”고 밝혔다.

그는 “정부여당이 현행 검인정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역사교과서 발행체제의 개선방안을 백지상태에서 논의하는 새로운 기구를 구성해 보자”며 “여기에서 현행 역사교과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증하고, 검인정 제도를 발전시키는 방안과 대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신, 대통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 절차를 일단 중단해 주기 바란다”며 “사회적 논의 기구 결과에 따르는 것을 전제로 그때까지 정치권은 교과서 문제 대신 산적인 민생현안을 다루는 데 전념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문 대표는 이어 “그리 된다면 우리 당도 국정교과서 반대 서명운동을 잠시 접고 사회적 논의기구 결원이 나올 때까지 경제 민생 살리기에만 전념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문 대표의 이날 제안을 ‘정치 노림수’라며 즉각 거부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교과서 문제를 논의하는 사회적 기구 구성 제안은 교과서 문제를 정치의 한복판으로 끌고 와 정쟁을 지속시키겠다는 정치적 노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이는 10·28 재·보궐 선거에서 완패한 야당 지도부가 선거 패배의 책임을 회피하고 야권의 분열을 막

새누리 “정치적 꼼수” 거절

예결·교문위 예산·법안 심의

역사교과서 공방 파행 계속

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며 “지금 문 대표가 할 일은 국회에서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처리와 예산안 심의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말로는 ‘민생 먼저’라면서 잘못된 역사교과서를 유지하려고 장외 전투를 벌이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라며 “지금 여야가 있어야 할 곳은 정쟁이라는 전장이 아니라 민생 해결을 위한 국회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놓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대립을 계속하면서 정기국회 본연의 기능인 예산과 법안 심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본격 활동에 들어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연일 파행을 거듭하고 있고, 각 상임위의 예산 심의 역시 교과서 문제에 발목을 잡힌 상황이다.

국회 예결위는 이날 이틀째 종합정책질의를 열었지만, 전날 교과서 논란에 종일 파행과 공전을 반복한 데 이어 이날도 예비비를 국정 교과서에 투입하는 문제로 초반부터 허비했다. 교과서 문제의 소관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전날 전체회의에서 예산과 법안 심의 대신 종일 역사 교과서 공방으로 일관했고, 오랜만에 청와대 참모진이 출석했던 국회 운영위 역시 사정이 다르지 않았다.

각종 경제활성화 및 민생법안 심의 역사 교과서 논란 속에 뒷전으로 밀려 있다. 여야 원내 관계자들에 따르면 법제사범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계류된 법안이 200건 가까이 쌓여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법안은 대부분 정쟁이 없는 정책 관련 법안들이지만 교과서 문제를 비롯한 정치적 이슈에 묻혀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



역사교과서 국정화되지 광주시민대책위원회와 민주주의 광주행동(준)이 29일 광주시교육청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에 대한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화 저지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강행땐 불복종 운동”

광주시민대책위·전남 237개교 교사 1648명·5월 단체 철회 촉구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지역에서도 거세지고 있다. 민주주의광주행동과 역사교과서 국정화저지 광주시민대책위원회는 29일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이들은 “국민적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국정교과서 고시를 강행한다면 불복종 운동은 물론 시민과 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아 대한교과서 편찬을 준비하는 등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남지역 237개교 역사·사회과 교사 1648명도 이날 전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일·독재 미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골자로 한 교사 선언문을 발표했다. 교사들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제 2유신 역사쿠데타’로 규정하고 “국정화 추진세력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범통조자 부정하고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등을 철저히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5월 3단체(5·18 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와 5·18 기념재단도 정부 당국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정교과서 조치는 정부가 국민 ‘통합’이라는 미명 하에 독재로 회귀하겠다는 의도밖에 볼 수 없다”면서 “정부와 국가에 충성하는 신민을 양성하겠다는 국정교과서의 취지는 피와 희생으로 이룩한 5·18가치인 민주·인권·평화와 정반대로 가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적화통일 교육” “친박실성파”

與野 국정화 공방 ‘막말 전쟁’

“야당이 화적때는 아니지 않느냐.”(새누리당 서정원 최고위원) “대통령은 무속인이 아니다.”(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여야간 신경전이 고조되면서 실전 수준을 넘어선 ‘막말 전쟁’으로 국회 분위기를 스스로 꺾어내리고 있다.

현 정부 청와대 홍보·정보수석을 지낸 이종현 최고위원은 28일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현행 교과서는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미리 적화통일 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해 결국 파행으로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이 원내대표는 2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은 교과서 국정화를 주장하기 전에 ‘두뇌의 정상화’가 정말 시급해 보인다”며 “이분들을 그냥 친박이 아니라 친박실성파로 부르고 싶다”고 비난거렸다.

주승용 최고위원도 시정연설 내용을 비판하면서 “대통령의 독특한 화법 때문에 연설을 듣다 보면 정신적인 불편현상까지 경험하게 된다”고 혹평했다.

문재인 대표도 전날 ‘국정화 반대 투어버스’ 출정식에서 “X인지 Y인지 막아봐야 알겠습니까”라며 앞으로 발행될 국정 교과서에 불신을 나타냈다.

이렇게 중재를 해도 모자랄 여야 대선 중진의 주요 당직자까지 전면에서 나서면서 또 또다른 논란을 촉발하고, 결국 내년도 예산 및 법률안을 처리할 정기국회에는 파행의 기운이 어른거리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명지대 신울 교수는 “국민의 정치 혐오증만 키우는 것으로서 어제 재·보궐선거 투표율이 사상 최저를 기록한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다”면서 “국민 민도를 우습게 알고, 두려워하지 않는 행태”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정치 현역평가 돌입...주류·비주류 충돌

내년 총선 현역 국회의원 물갈이를 위한 당내 평가 작업이 시작되는 등 총선 공전 1단계 과정이 시작되면서 새정치민주연합 내 주류와 비주류 진영의 정면충돌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특히, 10·28 보궐선거 참패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에 잠복해 있던 당내 계파 갈등을 다시 점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29일 자신의 싱크탱크 ‘내일’ 토론회에 참석, “지금 이 상태로 공천 작업만 한다고 하면 내년 총선도 이번 선거와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당이 바뀌고 거기에 따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한 다음에 공천 작업을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한길 전 공동대표 역시 “(이번 선거 결과는) 우리당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야당이 시민인지 운동권인지 알 수 없다. 이 정당을 공당으로 보기 어렵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조정관 전남대 교수도 “호남 민심은 문재인 대표를 신뢰할 수 없는 지도자로 보고 있다”며 “한국 결속의 정치 지도자 선출도 조사에서 문재인 대

안철수 ‘내일’ 토론회 지도부 성토 비주류 개혁·중도파 세력화 나서

표 선호도는 8%까지 추락, 박원순(31%), 안철수(20%)의 절반 이하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9%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호남 민심은 문재인 대표를 이미 비토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비주류 진영에서 정치 혁신과 당내 통합을 기치로 하는 정치적 모임 구성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개혁 성향의 비주류 의원들과 중도 진영 의원들을 규합, 당내 세력화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는 공천을 앞두고 목소리를 키우고 총선 이후 당내 주도권 경쟁을 고려했던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

메아리소리가 들려오는 제주여행

버스타어(2박3일)	렌터카 자유여행(2박3일)	할인 제주숙소
상품가격 완도·여수출발 269,000원 / 목포출발 249,000원 출발인원 10인 이상출발 / 10인 이하 별도 문의 / 20인 이상 오메가 서비스 포함사항 1. 선박: 완도-제주 or 목포-제주 왕복 선박 (여객터미널 이용료 포함) 2. 호텔: 신축 관광호텔 4인실 기준 2박 3. 차량: 25인승 소형버스 3일 (20명 이상 45인승 대형버스) 4. 전일정 관광지, 전일정 식사 포함 (완도발 7식, 목포발 6식) 선박정보 블루리래운: 완도(09:30발) → 제주(11:10착) / 제주(16:30발) → 완도(18:10착) 씨스타크루즈: 목포(09:00발) → 제주(13:20착) / 제주(17:00발) → 목포(21:20착)	상품가격 4인기준 1인 149,000원부터 / 3인기준 1인 169,000원부터 2인기준 1인 214,000원부터 출발인원 2인 이상출발 포함사항 1. 항공: 아시아나항공 왕복 항공권 (공항세, 유류할증료 포함) 2. 호텔: 신축 관광호텔 2박 기준 (2인 조식포함) 3. 차량: K5, YF소나타 LPG 기준 (48시간) / 종합보험(대인,대물,자손) 포함 4. 식사, 관광지 불포함. 항공정보 항공사: 아시아나항공 / 이코노미(일반석) 항공시간: 광주출발: 15:45 제주출발: 14:25 (2박3일 일정) 유의사항: 항공기 정비 및 기상 상황에 따라 운항 스케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주할인 펜션 1박 50,000원 부터 (2인기준 / 주중, 주말, 연휴기간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수 있음.) 제주할인 리조트 1박 85,000원 부터 (2인기준 / 주중, 주말, 연휴기간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수 있음.) 제주할인 호텔 1박 75,000원 부터 (2인기준 / 주중, 주말, 연휴기간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수 있음.) <small>본 상품은 예약현황에 따라 조기마감될 수 있으며, 소비자보호원의 취소수수료 규정을 따릅니다.</small>
1일차 목포 or 완도항 출발 → 제주항도착 → 비비방안들기체험(목포출발 제외) → 천연염색체험 → 메아리체험(제주오름 트레킹) → 저녁식사(갈치조림) → 숙소 2일차 숙소 → 한라산 원전정복(성판악·백록담 코스 / 중식 도시락) → 해수사우나 → 저녁식사(흑돼지구이) → 숙소 3일차 숙소 → 세계유네스코 등재 수월봉, 차귀도 탐방 → 점심식사(해물전골) → 조랑말승마체험 → 디미파크 기마공연(완도출발 제외) → 농수산물 직판장 → 제주항 → 목포 or 완도항 도착 <small>본 일정은 현지 기상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소비자보호원의 취소수수료 규정을 따릅니다.</small>	1일차 광주공항 출발 → 제주공항도착 후 렌터카 인수 → 자유일정 → 숙소 2일차 자유일정 3일차 숙소 → 자유일정 → 제주공항 도착 및 렌터카 반납 → 광주공항 도착 <small>본 일정은 현지 기상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소비자보호원의 취소수수료 규정을 따릅니다.</small>	할인 제주렌터카 아반떼, 레이, k3, SM3 [24시간 기준] 주중 17,000원 / 주말 23,000원 k5, YF소나타 [24시간 기준] 주중 19,000원 / 주말 26,000원 카니발, 그랜더스타렉스 [24시간 기준] 주중 39,000원 / 주말 49,000원 <small>본 상품은 예약현황에 따라 조기마감될 수 있으며, 소비자보호원의 취소수수료 규정을 따릅니다.</small>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컨소시엄 참여업체 예약문의 | 064-743-1100